



08-35 (통권 313호)

2008.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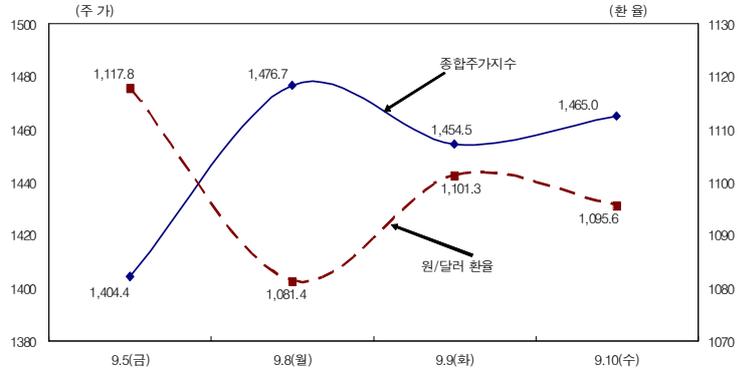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서민 경제 현황과 과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5~9.1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서민 경제 현황과 과제	1
주간 경제 동향	13
□ 실물 부문 : 생산자물가 급등세 둔화	13
□ 금융 부문 : 금융시장 불안 진정세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이 부 형 연 구 위 원 (3669-4011, lbh@hri.co.kr)
 : 이 성 룡 연 구 위 원 (3669-4457, leesy@hri.co.kr)

Executive Summary

□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서민 경제 현황과 과제

■ 서민 경제의 범위 및 분석 방법

현재 서민에 대해 학술적인 정의는 없으나 본고에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상위 6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을 서민으로 정의하여 분석한다. 중산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나,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소득 10분위나 5분위 분배의 상위 20%와 하위 40%를 제외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상위 20%계층과 중산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을 서민이라 한다면 소득 분포 상으로는 하위 40%가 서민 계층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조사 결과(도시근로자 기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지출, 부채와 자산에 관한 소득 계층별 추세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소득과 지출은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조사 결과 가운데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40%, 전체 평균, 하위 40%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분석하였다. 부채와 자산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상위 40%, 전체 평균, 하위 40%의 부채와 자산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편, 소득과 소비, 부채와 자산에 대해서는 명목, 실질, 체감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명목치와 체감치의 차이 뿐 아니라 서민 경제의 개선 정도에 대한 체감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는 외환위기 이전의 서민 경제와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서민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분석의 목적이 있다.

■ 지난 10년간의 서민 경제 현황 평가

(소득)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소득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고, 체감 소득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와의 격차 심화

첫째, 서민들의 소득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의 1995~2008년 소득 증가율은 명목 5.4%, 실질 1.9%, 체감 0.8%인데 반해 소득분위 하위 40%는 이보다 낮은 명목 5%, 실질 1.5%, 체감 0.4%를 기록했다.

둘째, 서민들의 체감 소득이 악화되고 있다. 소득 분위 하위 40%의 명목과 실질 소득은 1996년 대비 각각 68.3%,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 대상의 체감 소득은 1996년 108.9만원에서 2008년 2/4분기 106.6만원으로 2.1% 하락했다.

셋째, 소득분위 상위 40%와의 격차도 심화되었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득 수준은 상위 40%의 소득 수준에 비해 명목, 실질, 체감 모두 33.5%정도에 불과하다. 또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하위 40%의 상대 소득 비중은 명목, 실질, 체감 소득 모두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35.1%에서 2008년 2/4분기 33.5%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소비 :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소비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고, 체감 소비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상위 40%와의 격차도 심화됨. 더욱이 앵겔계수의 재상승, 가난 승계 가능성 증대, 삶의 질 지수 악화와 같은 문제도 나타남

첫째, 서민들의 소비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명목, 실질, 체감 각각 5%, 1.5%, 0.4%이나, 전체 평균 소비 증가율은 동 5.5%, 2%, 0.8%로 하위 40%보다 높았다.

둘째, 서민들의 체감 소비가 악화되었다. 소득 분위 하위 40%의 명목과 실질 소비는 1996년 대비 각각 70.6%,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감 소비는 1996년 87.7만원에서 2008년 2/4분기 87만 원으로 0.8% 하락하였다.

셋째, 상위 40%와의 격차 또한 심화되었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비 수준은 상위 40%의 소비 수준에 비해 명목, 실질, 체감 모두 47.9% 정도에 불과하다.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하위 40%의 상대 소비 비중은 명목, 실질, 체감 소득 모두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48.9%에서 2008년 2/4분기 47.9%로 악화되었다.

넷째, 앵겔계수(Engel's coefficient)가 재상승하였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앵겔계수가 2007년 0.285에서 2008년 2/4분기 0.289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앵겔계수의 상승은 전체 소비 가운데 식료품 소비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서민 계층의 소비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서민층의 가난 승계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다음 세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교육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비중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난 승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명목 기준 교육비 지출 평균 증감률은 5.9%로 전체 평균 6.9%와는 1%p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체감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음 세대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여섯째, 삶의 질 지수 또한 악화되고 있다. 가계 소비 지출 항목 가운데 삶의 질과 관계가 깊은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부분별 지수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그 결과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삶의 질 지수가 명목으로는 1995년 17.5에서 2008년 52.8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실질로는 2006년 40에서 2007년 39.4, 2008년 2/4분기 38.5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소득분위 상위 40%와 소득분위 하위 40%와의 명목, 실질, 체감 삶의 질 지수 격차는 1995년 각각 17.8, 28.6, 32.8에서 2008년 2/4분기 동 48.9, 50.3, 49.7로 확대되었다.

(부채 및 자산)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의 부채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고,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름

첫째, 서민층의 부채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부채 증가율은 명목 부채 기준으로 1999~2006년 연평균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소득분위 연평균은 27%, 상위 40%는 9.2%에 불과했다.

둘째, 서민층의 경우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다. 명목 기준 1999~2006년 연평균 부채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과의 차이는 소득분위 하위 40%가 40.9%p로 전체 소득분위 평균이 19.6%p, 소득분위 상위 40%의 0.6%p에 비해 매우 높았다.

셋째,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 자산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 부채 규모는 급증하였다.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 자산의 상대적 비중은 43.1%에서 39.6%로 3.5%p 하락하였다. 하지만 부채의 상대적 비중은 30%에서 74.9%로 44.9%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정부의 서민 경제 활성화 과제

최근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국민 생활 공감 대책을 수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국민 생활 공감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경기 진작 등을 통한 고용 창출 극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 신성장산업 투자 유도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서민층 근로소득 확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민층 대상 '창기고용 장려제도'의 마련, 육아·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서민층 근로 지원, 서민층 가계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서민층 가계의 근로소득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서민 금융의 안정 유도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 소외를 완화하고 창업 등을 통한 고용 창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빈민금융제도(Microfinance)나 금융 NGO와 같은 대안 금융의 활성화,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금융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민층의 금융 불안을 해소하고 창업 기회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단위의 고용 증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지역 금융 활성화, 지역에 존재하는 교육과 산업의 융합화 추진, 지역산업의 특화도제고 등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서민층의 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서민층 자녀들에 대한 자립 교육 자립 지원, 서민층 인재 발굴·육성, 주거·보건 의료·교통통신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등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층 가계의 앵겔계수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 지수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서민경제 현황과 과제

서민의 정의	-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포함된 소득 상위 6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을 서민으로 정의
---------------	---

과거 10년간 서민 경제 현황 평가	소득	- 소득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음 - 체감 소득이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분위 상위 40%와 격차 심화
	소비	- 소비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음 - 체감 소비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상위 40%와의 격차도 심화 - 앵겔계수 재상승으로 생활 수준 하락 - 가난 승계 가능성 증대 - 삶의 질 지수 악화
	부채 및 자산	- 부채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음 -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름 - 상위 40% 대비 자산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 부채의 상대적 규모는 확대

서민 경제 악화 원인	- 내수 부진 등에 따르는 경기 침체 - 물가 급등 - 임금 증가세 둔화 - 가계 부채 증가와 이자율 상승에 따르는 부채 상환 부담 증가
--------------------	---

신정부의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진작을 통한 고용 창출 극대화 - 서민층 근로 소득 확대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층 대상 '장기고용 장려제도' 마련 ·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서민층 근로 지원 · 서민층 가계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서민 금융의 안정 유도를 통한 서민층 금융소외 완화 및 창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금융 활성화,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충 -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고용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종합입지지원조례' 마련 · 중장기 지역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 지역 기업 일품 구매 운동 등 지역 주민 전원 참가형 캠페인 추진 - 서민층의 미래 삶의 질 제고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층 자녀 자립 교육 자원 지원, 서민층 인재 발굴 육성 · 주거 안정 대책이나 보건의료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물가 안정 노력 지속
--------------------------	--

1. 서민 경제의 범위 및 분석 방법

○ (서민의 개념) 현재 서민에 대해 학술적인 정의는 없음. 여기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상위 6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을 서민으로 정의하여 분석함

- 중산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며,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소득 10분위나 5분위 분배의 상위 20%와 하위 40%를 제외한 계층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득 상위 20%계층과 중산층(상위 20~60%)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을 서민이라 한다면 소득 분포 상으로는 하위 40%가 서민 계층에 해당됨

○ (분석 방법)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조사 결과(도시근로자 기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지출, 부채와 자산에 관한 소득 계층별 추세와 차이를 분석

- 소득과 지출 :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조사 결과 가운데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40%, 전체 평균, 하위 40%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분석

- 부채와 자산 :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상위 40%, 전체 평균, 하위 40%의 부채와 자산 구조를 분석함

- 서민경제의 개선 정도에 대한 체감도 분석¹⁾ : 한편, 소득과 소비, 부채와 자산에 대해서는 명목, 실질, 체감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명목치와 체감치의 차이 뿐 아니라 서민경제의 개선 정도에 대한 체감도를 분석

· 시계열 자료의 절대비교를 위하여 데이터의 시작년도인 1995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를 재편성하여 산출함

· 실질 소득 및 소비지출 : $(\text{명목소비지출} / \text{소비자물가지수}) \times 100$

· 체감 소득 및 소비지출 : $(\text{명목소비지출} / \text{체감물가지수}) \times 100$

1) 서민층의 소득 및 소비지출에 대한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서민층의 실생활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상대적 소비 비중이 높은 152품목을 대상으로 작성된 체감 물가를 이용.

2. 지난 10년간 서민 경제 현황 평가

2-1) 소득

- (평균보다 낮은 서민들의 소득 증가세)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명목, 실질, 체감 각각 5%, 1.5%, 0.4%이나,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은 동 5.4%, 1.9%, 0.8%로 나타남
- (악화되고 있는 서민들의 체감 소득) 소득 분위 하위 40%의 명목과 실질 소득은 1996년 대비 각각 68.3%,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감 소득은 1996년 108.9만원에서 2008년 2/4분기 106.6만 원으로 2.1% 하락
- (상위 40%와의 격차 심화)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득 수준은 소득 분위 상위 40%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 :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득 수준은 상위 40%의 소득 수준에 비해 명목, 실질, 실질체감 모두 33.5% 정도에 불과
 - 소득분위 상위 40%와의 격차 심화 :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하위 40%의 상대 소득 비중은 명목, 실질, 실질체감 소득 모두 외화위기 이전인 1996년 35.1%에서 2008년 2/4분기 33.5%로 오히려 악화됨

< 계층별 명목, 실질, 체감 소득의 추이 >

구분		전체 소득			
		1996년	1998년	2008년	1995~2008년 평균 증감률
평균	명목	2,152,473	2,132,761	3,761,436	5.44
	실질	2,051,537	1,810,186	2,397,958	1.87
	체감	2,031,018	1,707,438	2,063,435	0.75
상위 40%	명목	3,283,811	3,342,084	5,800,154	5.58
	실질	3,129,824	2,836,602	3,697,663	2.01
	체감	3,098,519	2,675,593	3,181,828	0.87
하위 40%	명목	1,154,235	1,076,206	1,943,259	5.04
	실질	1,100,109	913,432	1,238,849	1.52
	체감	1,089,106	861,585	1,066,026	0.40

원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조사 결과.

주 : 2008년은 2/4분기 조사 결과 기준임.

2-2) 소비

- (평균보다 낮은 서민들의 소비 증가세)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명목, 실질, 체감 각각 5%, 1.5%, 0.4%이나, 전체 평균 소비 증가율은 동 5.5%, 2%, 0.8%로 나타남
- (악화된 서민들의 체감 소비) 소득 분위 하위 40%의 명목과 실질 소비는 1996년 대비 각각 70.6%,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감 소비는 1996년 87.7만원에서 2008년 2/4분기 87만 원으로 0.8% 하락
- (상위 40%와의 격차 심화)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비 수준은 소득 분위 상위 40%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비 수준 :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비 수준은 상위 40%의 소비 수준에 비해 명목, 실질, 체감 모두 47.9% 정도에 불과
 - 소득분위 상위 40%와의 격차 심화 :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하위 40%의 상대 소비 비중은 명목, 실질, 체감 소득 모두 외화위기 이전인 1996년 48.9%에서 2008년 2/4분기 47.9%로 오히려 악화됨

< 소득분위별 가계지출 대비 소비지출 비중 추이 >

구분		전체 소득			
		1996년	1998년	2008년	1995~2008년 평균 증감률
평균	명목	1,395,258	1,297,726	2,148,471	5.50
	실질	1,329,830	1,101,448	1,541,802	1.98
	체감	1,316,530	1,038,929	1,326,716	0.84
상위 40%	명목	1,902,157	1,763,479	3,313,175	6.22
	실질	1,812,960	1,496,757	2,112,186	2.67
	체감	1,794,827	1,411,800	1,817,530	1.51
하위 40%	명목	929,892	879,156	1,586,846	4.98
	실질	886,287	746,186	1,011,632	1.48
	체감	877,422	703,831	870,506	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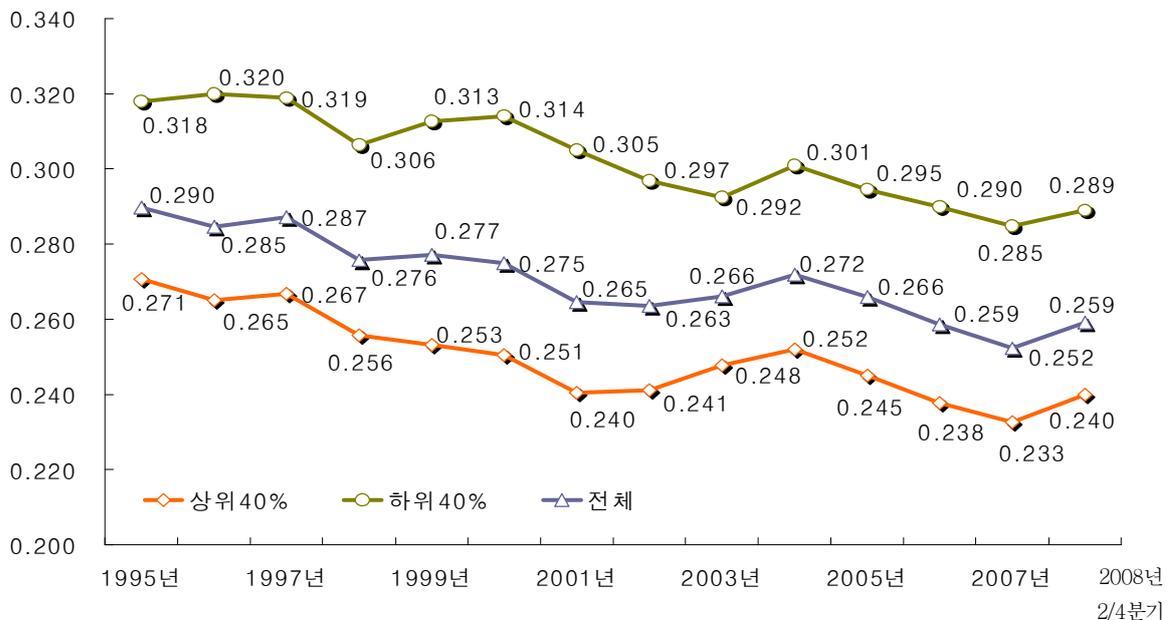
원자료 : 통계청, 가계소비동향조사 결과.

주 : 2008년은 2/4분기 기준.

○ (엔겔계수 재상승) 전반적으로 소득분위 상위 40%와 소득분위 하위 40%의 엔겔계수(Engel's coefficient)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들어서는 소득분위 하위 40%의 엔겔계수가 재상승

- 엔겔계수의 개념 : 1857년 작센의 통계국장인 엔겔이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엔겔의 법칙'이라하며, 총가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점하는 비율을 엔겔계수라 함
 - 따라서 엔겔계수는 그 크기가 커지고 또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생활의 수준이 낮거나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함
- 엔겔계수 재상승 : 소득분위별 엔겔계수 추이를 보면 2004년 이후 모든 계층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2/4분기에는 2007년에 비해 다소 상승
 - 전체 평균 엔겔계수는 2007년 0.252에서 2008년 2/4분기에 0.259로, 소득분위 상위 40%는 동 0.233에서 0.24로, 소득분위 하위 40%는 동 0.285에서 0.289로 다시 상승

< 소득분위별 가계 엔겔계수 추이 >



원자료 : 통계청, 가계소비동향조사 결과.

주 : 2008년은 2/4분기 기준임.

○ (가난 승계 가능성 증대)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다음 세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교육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비중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난 승계 가능성이 증대됨

- 평균보다 낮은 교육 지출 증가율 :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연평균 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을 뿐 아니라 체감 교육 지출 증가율이 1%대에 그침
 -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명목 기준 교육비 지출 평균 증감률은 5.9%로 전체 평균 6.9%와는 1%p의 차이가 존재
 - 특히 체감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음 세대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상위 소득 계층과의 격차 심화 : 소득분위 하위 40%의 교육 지출 규모는 2008년 2/4분기 소득분위 상위 40%의 39%에 불과하며, 이는 1996년 40.2%에서 1.2%p 하락한 수준임

< 소득분위별 교육 지출 규모 추이 >

구분		전체 소득			
		1996년	1998년	2008년	1995~2008년 평균 증감률
평균	명목	136,433	139,307	266,093	6.89
	실질	130,035	136,364	118,237	3.31
	체감	128,735	111,526	145,973	2.15
상위 40%	명목	197,757	211,044	377,900	7.04
	실질	188,484	179,124	240,915	3.44
	체감	186,599	168,957	207,307	2.27
하위 40%	명목	79,453	75,070	147,348	5.94
	실질	75,727	63,716	93,936	2.44
	체감	74,969	60,099	80,832	1.31

원자료 : 통계청, 가계소비동향조사 결과.

주 : 2008년은 2/4분기 기준.

○ (삶의 질 지수 비교) 가계 소비 지출 항목 가운데 삶의 질과 관계가 깊은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삶의 질 지수를 도출, 소득분위별 삶의 질 지수를 비교

- 삶의 질 지수 도출을 위한 변수 :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 5개 부문 소득분위별 가계 소비 지출을 변수로 활용

- 삶의 질 지수 도출 방법 : 이들 다섯 가지 주요 지출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부분별 지수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 산출함
 · 조정화 단계 : 각각의 부문별 지표의 절대비교와 판독의 용이성을 위해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25인 조정을 통해 범위를 확정함
 · 조정화 단계를 거친 각각의 지표들을 가중 평균하여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함

○ (소득분위 하위 40%의 삶의 질 지수 악화)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삶의 질 지수가 명목으로는 1995년 17.5에서 2008년 52.8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실질로는 동 2006년 40에서 2007년 39.4, 2008년 2/4분기 38.5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체감 기준으로 보아도 삶의 질 지수가 1995년 27에서 2006년 35.8까지 개선되다, 2007년 34.7, 2008년 2/4분기 33로 다시 하락

○ (소득분위 하위 40%와 상위 40%의 삶의 질 지수 격차 확대) 소득분위 상위 40%와 소득분위 하위 40%와의 명목, 실질, 체감 삶의 질 지수 격차는 1995년 각각 17.8, 28.6, 32.8에서 2008년 2/4분기 동 48.9, 50.3, 49.7로 확대

< 소득분위별 삶의 질 지수 추이 >

구 분		1995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5년	2008년
평 균	명목	25.97	31.88	31.88	43.41	63.80	75.63
	실질	36.16	42.15	34.07	47.51	57.98	62.01
	체감	42.62	48.65	35.85	47.76	54.81	56.15
상위 40%	명목	35.30	44.08	44.57	60.20	83.98	101.67
	실질	51.11	60.91	51.83	69.93	80.61	88.85
	체감	59.79	69.95	55.16	71.36	77.76	82.65
하위 40%	명목	17.50	21.32	20.96	28.57	46.30	52.80
	실질	22.53	25.96	18.85	27.74	38.41	38.53
	체감	26.95	30.24	19.29	26.94	34.94	32.97

원자료 : 통계청, 가계소비동향조사 결과.

주 : 2008년은 2/4분기 기준.

2-3) 부채 및 자산

○ 소득분위 하위일수록 부채 증가율이 높고,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름

- 소득분위 하위 40%의 부채 증가율은 명목 부채 기준 1999~2006년 평균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소득분위 평균이 27%, 상위 40%의 부채 증가율은 9.2%에 불과함
- 명목 기준 1999~2006년 연평균 자산 증가율과 부채 증가율의 차이는 소득분위 하위 40%가 40.9%p로 전체 소득분위 평균이 19.6%p, 소득분위 상위 40%의 0.6%p에 비해 매우 높음

< 소득분위별 가계의 평균 자산 및 부채 증가율(1999~2006년) >

구분	평균			상위 40%			하위 40%		
	명목	실질	실질	명목	실질	실질	명목	실질	실질
자산	7.4%	4.3%	3.4%	8.6%	5.5%	4.6%	10.1%	6.9%	6.0%
부채	27.0%	23.3%	22.3%	9.2%	6.1%	5.2%	51.0%	46.3%	45.3%

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주 : 부채규모는 1. 금융기관 부채 2. 비금융기관 부채 3. 개인적으로 빌린 돈 4. 전세금 임대보증금 5. 부어야 할 계 6. 기타 부채의 합임.

○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의 자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 부채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음

-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의 자산 비중은 43.1%에서 39.6%로 3.5%p 하락함
-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의 부채 비중은 30%에서 74.9%로 44.9%p나 상승

<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각 분위별 자산과 부채 비중 >

구분	평균			하위 40%		
	1999년	2000년	2006년	1999년	2000년	2006년
자산	72.9%	70.1%	66.5%	43.1%	46.5%	39.6%
부채	61.0%	55.4%	125.8%	30.0%	2.04%	74.9%

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주 1. 부채규모는 1. 은행예금 2. 주식, 채권, 신탁 3. 저축성 보험 4. 아직 타지 않은 계 5.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6. 기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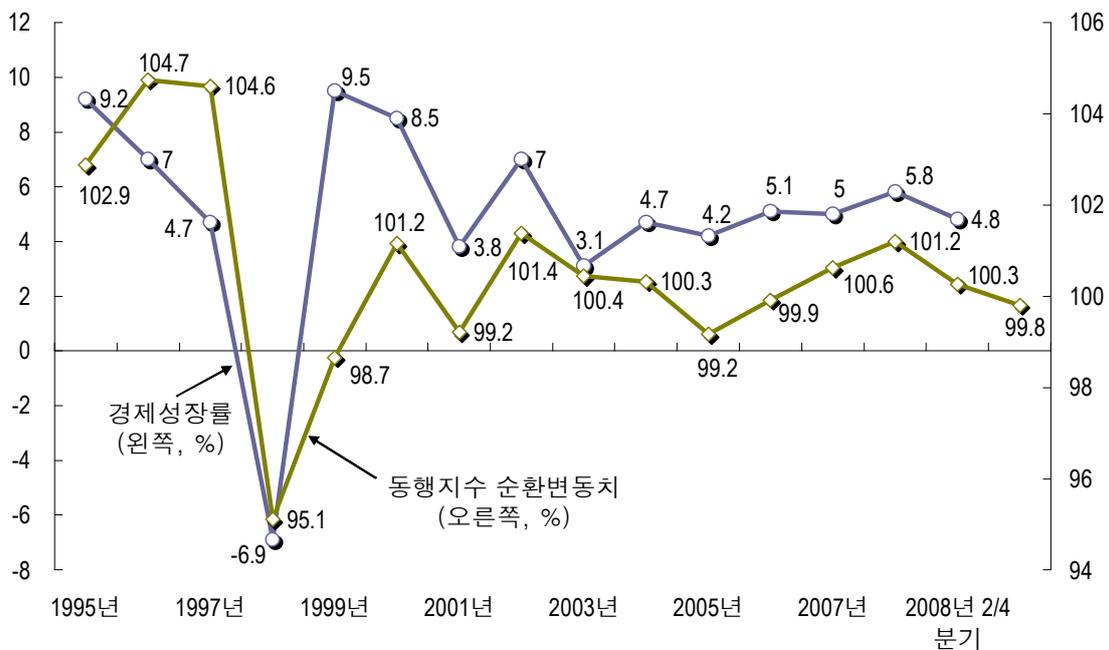
2. 상대 비중 산출 결과는 명목, 실질, 실질체감 모두 동일.

3. 서민 경제 악화 원인

○ (경기 침체) 서민경제가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에 의한 영향이 큼

- 경제성장률 하락 : 외환위기 이전 인 1996년 경제성장률은 7%였으나, 외환위기(1998년)와 카드대란(2001년) 이후 반등세를 제외하면 2003년 이후에는 연간 5%대 이상 성장이 어려운 상황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101.4%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2008년 1/4분기에는 101.2%까지 회복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어 7월에는 99.8%까지 하락

< 주요 경기 지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물가 상승) 국제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물가 상승 또한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고유가 지속 : Dubai유가는 지난 9월 5일 101.33달러를 기록하여 2007년 말 89.3달러 대비 13.5%나 상승하였으며, WTI 선물가격은 지난 9월 5일 106.23달러로 2007년 말 95.98달러 대비 10.7%나 상승
 - 국제원자재 가격 고수준 유지 : 로이터상품가격지수는 2008년 9월 5일 현재 367.7로 2007년 말 358.7보다 약 2.5% 상승
 - 물가 급등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8월 2.0%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08년 8월에는 5.6%를 기록, 생산자물가 상승률 또한 동기간 0.9%에서 12.5%로 급등
- (이자 부담 증가) 가계 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마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
 - 가계 부채 부담 확대 : 가계부채 규모는 2006년 1/4분기 약 501조에서 2008년 2/4분기에 약 623조 원 규모로 확대
 - 가계대출 금리 상승 : 이에 반해 동기간 예금은행 가중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5.69%에서 6.96%로 상승함으로써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
- (임금 증가세 둔화) 고용 창출력 저하로 전체 노동 임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더욱 악화
 - 고용 창출력 저하 : 국내 신규 취업자 수 규모는 2007년 연평균 28.2만 명인데 반해 2008년 들어서는 1/4분기 21만 명, 2/4분기 17.3만 명, 7월에는 15.3만 명으로 점차 감소
 - 노동 임금 증가세 둔화 : 전산업 종사자 전년 대비 월급여 총액 증가율은 2005년 7.8%에서 2006년 6.8%로 1%p 하락

4. 신정부의 서민 경제 활성화 과제

- (경기 진작 등을 통한 고용 창출 극대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 신성장산업 투자 유도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해야 함
- (서민층 근로소득 확대 전략 마련) 서민층 대상 '장기고용 장려제도'의 마련, 육아·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서민층 근로 지원 등을 통해 서민층 가계의 근로소득을 확대시켜야 함
 - 서민층 대상 '장기고용 장려제도' 마련 : 서민층을 대상으로 장기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우대나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서민층 대상 '장기고용 장려제도'의 마련
 - 육아·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서민층 근로 지원 : 서민층 밀집 지역 또는 교통 요충지에 서민층을 위한 공적 육아·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민층 가계 구성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임
 - 서민층 가계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육아, 환경, 간병 등의 분야에 있어서 창출되는 사회적 일자리의 일정 부분을 서민층 가계에 할당하는 등 서민층 가계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또한 중요함
- (서민 금융의 안정 유도) 대안 금융의 활성화,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금융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민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 창출 기회 보장과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임²⁾
 - 대안 금융의 활성화 : 빈민금융제도(Microfinance)나 금융 NGO의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소외 현상을 완화해야 할 것임

2) 이하, 박덕배, 「서민금융 약화와 활성화 과제」, VIP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06년.

-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 약 7천여 개의 대안금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25~30%의 높은 이용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소규모 창업대출과 밀착된 사후관리를 중시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창업 및 상담 지원을 강화
 -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단체, 대형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담보 및 신용이 약한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금융 NGO를 도입
-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대** : 현재와 같이 은행권 비중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이 활성화될 때까지 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지역 건설 경기 회복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서민층들의 고용과 소득 창출 기회를 증대시켜야 함**
-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 지역 금융 활성화, 지역에 존재하는 산업과 기술, 비즈니스의 융합화 추진, 지역산업의 특화도 제고 등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고용을 창출
 - 지방 정부, 금융기관, 평가회사 등 지역 금융 담당 기관 및 기업 평가 경험자들로 구성된 가칭 '지역금융평가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업 평가 능력을 제고시켜 지역 중소기업 금융의 원활한 흐름을 조성
 -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종합입지지원조례' 등을 마련하여 관련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구조조정특별조례' 마련을 통해 경쟁력이 약하거나 사양 산업에 속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 미에현은 '미에현기업입지촉진조례'를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밸리구상관련산업입지촉진보조금', '산업집적촉진보조금', '연구시설·과소지역등입지촉진보조금', '구조개혁특별구역내연구개발시설보조금' 등을 마련,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미에현을 포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와 유사한 기업 유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국내 회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 기업 일품 구매 운동’ 등 지역 주민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 건설 경기 회복 대책 마련** :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 예산의 조기 집행, 행정도시나 혁신도시와 같은 정부 주도의 건설 투자의 조속한 시행,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등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통해 서민층의 고용 및 소득원을 강화
- **(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서민층 자녀들에 대한 자립 교육 지원** 주거·보건의료·교통통신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등이 필요함
 - **서민층 자녀 자립 교육 지원** : 서민층 자녀를 위한 교육시스템과 직업훈련 시스템 및 기업의 연계를 지원·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 서민층 자녀들의 자립 촉진해야 함
 - **서민층 인재 발굴 육성** : 서민층 자녀 가운데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국가적인 인재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서민층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물가 안정 노력 지속)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층 가계의 앵겔계수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 지수도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함**

이부형 연구위원(02-3669-4011, lbh@hri.co.kr)

이성룡 연구위원(02-3669-4457, leesy@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생산자물가 급등세 둔화

○ 8월 중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산품 가격 하락으로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12.3%로 상승함

- 공산품은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제품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원재료비 하락으로 인한 화학제품 및 1차금속제품 하락세로 전월대비 0.8% 하락. 전년동월대비 17.1% 상승하였음
- 농림수산품은 계절적 출하증가로 과일 가격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채소 및 축산품 등의 기상악화로 인한 수요증가와 출하감소로 전월대비 4.9%, 전년동월대비 5.8% 상승하였음
- 서비스는 금융(-1.0%)부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운수(0.5%), 전문서비스(0.1%), 기타서비스(0.1%) 등의 부문이 오름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보합세를 유지.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하였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7월	8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3.9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10.7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13.0	-
		수출	14.4	14.1	9.4	18.2	17.4	23.2	36.0	-
		광공업생산	8.3	6.8	6.0	11.0	10.6	8.6	9.1	-
	공급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90	2,362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1	3.1
		수입	18.4	15.3	7.3	25.9	28.8	30.2	47.2	-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1	-24.5	-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59	1	-19	-	
물가	생산자물가	0.9	1.4	1.2	3.0	5.1	9.0	12.5	12.3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8	5.9	5.6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금융시장 불안 진정세

○ (해외 금융 시장) 미국 국채 금리 하락

- 금리: 미국 정부의 양대 국채 모기지 업체 구제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침체 완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폭 하락 (국채 10년물 : 3.70→3.57%)
- 환율: 달러화는 미국 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에 강세를 시현한 반면, 세계 증시 하락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소폭 약세로 마감 (\$/€ : 1.4268→1.4134, ¥/\$: 107.73→106.81)

○ (국내 금융 시장) 원화 환율 대폭 하락

- 주가: 9월 위기설이 진정되어 투자심리가 안정되고 최근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전주말 대비 상승 (1,404.8→1,468.98)
- 금리: 원화 환율 급락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80→5.73%)
- 환율: 9월 위기설이 진정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117.8→1,095.5)

○ (전망)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면서 금융지표의 변동폭 감소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4/4	1/4	2/4	3/4	4/4	1/4	9.5	9.10 ¹⁾
국내	거래소 주가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703.9	1,404.38	1468.98
	국고채3년(%)	4.92	4.76	5.26	5.46	5.74	5.10	5.80	5.73
	원/달러	929.8	940.9	923.8	915.1	936.1	990.4	1,117.8	1,095.5
해외	DOW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63	11,220	11,230
	Nikkei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2,526	12,212	12,400
	미국채10년(%)	4.70	4.57	5.02	4.59	4.02	3.87	3.70	3.57
	일국채10년(%)	1.69	1.60	1.88	1.69	1.51	1.45	1.46	1.51
	달러/유로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5788	1.4268	1.4134
	엔/달러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99.70	107.73	106.81
	두바이(\$/배럴)	56.71	63.12	66.42	76.64	89.06	97.66	101.77	98.67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9.9) 기준